"자치분권 개헌, 국가 경쟁력 강화 기폭제"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서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논의

진정한 지방분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구체적 일정이 제시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8일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한국지방자치학회', 이해식 국회의원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자치분권개헌 필요성 및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주제로 개최됐다.

개회식에는 이해식 의원과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부회장이 개회사를,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환영사를 했으며, 박병석 국회의장(서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영상), 김철민 자치와균형 포럼 대표(영상)가 축사를 했다.

또, 행사에 김상희 국회부의장,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영배·이형석·김종민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 인사말씀을 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지난 해 전부개정이 이뤄진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의 본격시행을 앞둔 중요한 시기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회 지방자치 포럼 등과 공동으로 지방정부 핵심인사와 학계 전문가를 초청, 자치분권의 현 주소와 문제점과 함께, 향후 과제와 비전을 모색하고 이를 대선후보자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실효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 : 분권화와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를 발표했다.

안 전 원장은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하는 헌법개혁은 2022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의 후보공약으로 제시하고, 대선 후 전국적 규모의 '국민주권 개헌회의'를 구성해 약 2년간 공론과정을 거쳐 작성된 개헌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발의, 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선거일에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헌법개혁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제안했다.

또한, 패널 토론진행은 임승빈 명지대교수(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가, 토론자로는 이해식 국회의원과 이시종 충북지사(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날, 송하진 회장은 먼저, 대선공약 마련을 위해 개헌을 비롯한 혁신과제 발굴에 앞장서 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송 회장은 "코로나19 등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34년이란 긴 세월동안 변화된 지방분권의 가치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헌법도 이에 맞게 개정돼야 함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팬데믹의 위기를 넘어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양원제도를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계는 물론, 국회와 지방정부 모두가 함께 뜻과 지혜를 모아, 진정한 지방분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실질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시된 지역대표형 상원은 지역별 의석배분으로 소수의 지역 의견도 반영할 수 있고,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수용이 가능하므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유호상 기자

도정현안 추진 '중추'

전북도 정무특보에 황현 전 도의회 의장

전북도는 황현 전 전북도의회 의장을 9일자로 정무특보(2급 상당)에 임명한다고 8일 밝혔다.

황현 신임 정무특보는 3선의 도의원 출신으로, 제10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을 역임했으며,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부회장에 선임되는 등 정치권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정무특보는 2급상당의 전문임기제로서 도지사의 도정관련 정무 및 정책결정을 보좌하고, 국회, 도의회, 정당 등 관련 기관, 단체체와의 유대를 강화하며, 기타 도정과 관련한 정무적인 보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북도는 "신임 정무특보는 3선의 도의원 활동과 도의회의장 등을 역임하며, 탁월한 역량을 갖춘 정치인으로 온화한 성품과 뛰어난 업무추진력은 충분히 검증됐다"며 "앞으로 국가예산 확보 등 전북도의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정치권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모든 것 던져 정권 재창출"

민주 이낙연 전 대표 의원직 전격 사퇴 "민주당 · 민주주의 가치 지키기 위해 종로구민께 죄송"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8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광주 · 전남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8일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임기 4년의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종로구민들게 한없이 죄송하다"면서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서울 종로에 진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잇따라 패배하면서도 끝내 대통령이 되셔야 했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왜 패배와 절망 앞에서도 지역주의 장벽에 끝까지 도전하셨는지, 저희 아버지가 왜 동네 사람들에게 빨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민주당의 이름 없는 지방 당원으로 평생을 사셨는지"라고 물으며 "그것은 민주주의 가치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사퇴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하고 "호남일정에 맞춰서 (선언을)한 것은 아니다. 며칠간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의원직 사퇴 선언에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의 표심이 움직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를 대한민국 인공지능(AI)수도로, 전남을 동북아 에너지 중심로 만들겠다는 지역 발전전략도 발표했다. /뉴시스

'현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전북본부 회원은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땀이 차별받지 않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치인, 가장 유능하고 도덕적인 정치인, 정세균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군산 전북대병원 차질 없이 완공돼야"

김종식 도의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 군산2)은 지난 7일 열린 전북도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중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군산과 전북발전을 위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군산 전북대병원이 안정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북 내 지역 발전이 곧 전북발전으로 이어진다"며 "군산의 현안 사업 중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행정부지사님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김 의원은 "군산전북대학병원의 경우 수년 전부터 논의됐던 사업이었지만, 이제야 진행에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며 "그런데도 재정적 어려움과 행정 절차의 미흡함이 남아있음"을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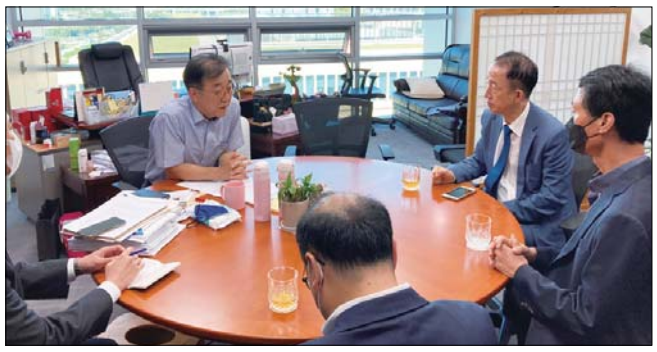
그러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병원 설립에 재정적 어려움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북이 정부와 각 관계기관의 지원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군산전북대학병원 설립이 제약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종식 의원은 "전북도일반회계에서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법정전출금이 상황에 따라 임의로 전출되고 보류돼 지난 1차 추경에서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에 혼선을 가했던 것"에 대해 지적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법적으로 전출되는 예산이 절차상 차질 없이 이뤄져, 전북교육을 꾸려나가는데 혼선되지 않도록 하고,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균형발전 저해 근본적 문제들도 개선 시급"

민주 김윤덕 의원 '혁신도시 시즌2' 진행 균형위원장에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혁신도시 시즌2'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8일 국회에서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혁신도시 시즌2'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10월로 예고된 정부의 전국 메가시티 지원방안과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이 함께 발표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따라, 실질적인 전북의 산업 성장을 견인할 핵심 공공기관과 대규모 R&D 인프라를 유치하기 위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이 같은 만남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작년 한 해만 9만3,000여 명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됐고, 그중 전북의 청년 인구 유출이 전국 최고에 달하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비롯한 파멸적인 지방소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회는 조속한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시작되는 '혁신도시 시즌2'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지역과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 국가적 의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균형위의 전향적 역할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 자세"를 요구했다.

이에, 김사열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한 로드맵 보고는 마친 상태이지만,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계획들을 조속히 추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의정활동의 핵심가치로 삼아 국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가재정법'을 대표발의했고, 관련 현안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호상 기자

민주 정책위부의장에 유희태 전북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유희태 전북도당 부위원장이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

유 부의장은 금융 경제분야 전문가로서 당의 정책 수립에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내년 지방선거 완주군수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뉴시스

"바른 역사의식 고취 위해 본예산 편성 적극 반영을"

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 익산2)는 8일 2021년도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도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조 5,879억 원 보다 3,558억원(9.9%) 증액된 3조 9,437억 원 규모로 도의회에 제출됐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류정섭 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이어 예결위원들의 전북도 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 및 정책대안이 제시됐다.

김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도내 학교 '일제 잔재 현황'에 대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보면, 도내 학교 교표, 교가, 교목 등에 일제 잔재가 여전히 상당 부분 남아있음에도 청산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학생들의 바른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본예산 편성에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도 교육청의 예산이 4조원 정도에 이르러 매월 학생 1인당 166만원 정도가 지원되나,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문제는 심각하다"며 학생과 학부모 니즈와 학력신장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을 당부했다.

이어, "혁신학교 운영목적에는 동의하나, 중.고등학교 등의 입시위주 교육과의 연속성이 없어 현실과 괴리가 있고, 교육감의 정책철학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이한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은 "코로나19와 기타 사정변경으로 취소나 축소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도, 금번 추경에 감액편성된 사업들이 없음"을 지적하며 "7월까지 집행률이 전무한 사업 또한 9건에 81억 원이나 되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주장했다.

최찬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추경 규모의 절반에 해당하는 1,900억 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편성한 기금이 중장기적인 기금 운용 로드맵 등 구체적인 지출계획이 부족함을 질타했다.

또한, 향후 기금이 조례 목적 및 '그린스마트 미래형 학교' 등 새로운 수요에 맞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최종 제2회 추경 규모는 실국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문 대통령, '산업 차관, 대선 공약 발굴 지시'에 "매우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일부 산업부 직원들에게 '차기 대선 캠프 공약으로 제안할만한 어젠다를 내달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박 차관의 내부 지시는 대선 캠프 공약 수립 과정에 부처의 정책 과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민감한 대선 시기에 엄중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문 대통령의 지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구독 · 광고문의 288-9700